



## 지뢰밭 속의 순항? : 2014년 경제 전망

2013.11.4 | 정태인\_ 새사연 원장 | catin60@gmail.com

이제 한국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즉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고용조건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확대로 내수를 늘려야 3% 이상의 성장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정책은 곧 국민들이 일제히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수용했던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를 실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미 증명되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정 반대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 1. 세계 경제는 3개의 지뢰를 비켜갈 수 있을까?

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0년대 전반기의 호황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장기침체” 라고 말하는 게 온당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뒤에서 보듯이 2008년 위기의 중요한 원인들은 거의 제거되지 않았고 위기를 막기 위해 취했던 ‘비전통적’ 정책들을 부드럽게 거둬들일 방법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안고 있는 시한폭탄, 또는 미해결의 과제들이 폭발하지 않는 한 선진경제권은 그럭저럭 2%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완만한 회복은 개발도상국의 경기둔화, 또는 위기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지난 9월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발언 이후 신흥경제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들 경제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를 맞은 나라들(태국, 한국, 인도



네시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브라질,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대 GDP 경상적자 비율, 대외채무비율, 외환보유고 비율은 그다지 나아보이지 않는다<sup>1)</sup>.

한편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해서 이를 국유 자산의 판매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지방 정부가 파산의 위기에 처한다면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금융경색 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강력하기 때문에 급격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1979년 한국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1980년대에 공권력에 의해 수습된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7% 중반 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2009년 -2.1%를 기록했다가 2010년 4.0% 성장으로 반등한 후, 2011년에서 13년까지 3년 연속 2% 대(2013년 2.1%)를 기록했던 세계경제는 2014년에 조금 더 나아져서 3%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 곳곳의 지뢰들 1) 양적완화정책의 축소와 신흥경제의 위기 가능성

내년에 자못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모두 미국의 상황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가을부터 최근까지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축소가 그것이다.

지난 10월 17일 미국 의회는 정부의 부채상한선 인상에 관한 합의 시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했다. 즉 현재 문제는 미봉된 상태이며 미국의 정치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의 최근 칼럼<sup>2)</sup> 제목대로 “사고뭉치 미국(America the Reckless)”의 비생산적 정당정치는 계속 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들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 버냉키의 발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양적 완화 정책의 축소는 금년 말, 내년 초에도 계속 이슈가 될 전망이다.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일단 정책 실행을 연기했고 ‘비둘기파’ (온건파)인 재닛 옐렌(Janet Yellen)이 차기 의장에 지명됨에 따라 이 정책의 속도와 규모는 충분히 완화되어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하지만 이 비전통적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또 이 정책을 거둬들일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닥쳐올지

1) UNdesa, 2013, Link Global Economic Outlook 2014-2015. O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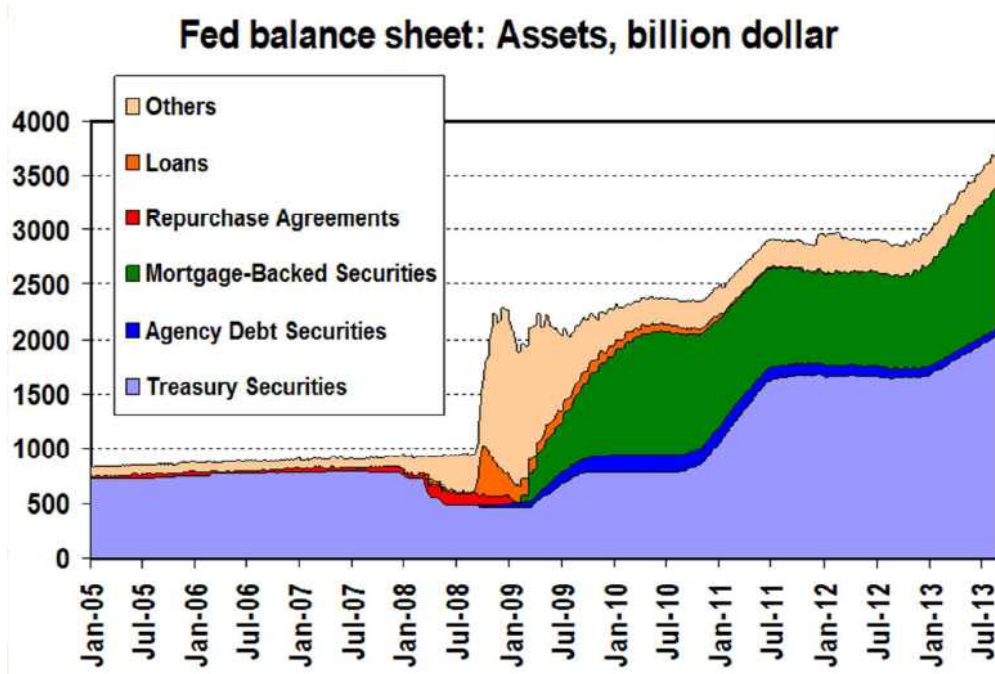
2) Spence, M., 2013, America the Reckless, 10.17.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on-the-price-of-us-political-dysfunction-by-michael-spence>



도 모를 위험 때문에 세계경제에 최대한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림 1 :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



출처 : Hong, 2013<sup>3)</sup>

위 표에서 보듯이 2008년 7월부터 연준의 대차대조표(차변)은 3.5배 이상 부풀어 올랐다. 그 내역을 보면 재무성 증권이 약 4배로 늘었고, 특히 주택저당 증권(MBO, 초록색) 매입이 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비전통적” 금융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이 정책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함으로써 부실은행을 구제하고 금융시장을 진정시켜서 간접적으로 경제회복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위험 프리미엄이 잠복하도록 만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며 특히 신흥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너무 일찍, 너무 강하게 양적완화정책을 축소시키면 장기이자율이 치솟아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뒤흔들고 신흥경제로부터 자본이 빠져 나와 결국 이들의 외부 금융비용을 높일 것이다. 후자는 이미 신흥경제를 뒤흔들어 “버냉키 쇼크” 라는 이름을 얻었다. 브라질,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의 경상적자 비율(경상적자/GDP), 대외채

3) Pingfan Hong, 2013, Link Global Economic Outlook 2014-2015. Oct.



무비율, 외환보유액비율은 1997년 한국의 지표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두배 이상 나쁜 상황이다. 만일 동아시아 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세계경제는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 것이다.

## 곳곳의 지뢰들 2) 금융개혁의 실종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선진국 금융시장들은 완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실물경제와 괴리된 이 현상은 자산거품이 아닐까? 과연 2009년 이후 전 세계가 목소리를 높였던 금융개혁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프린스턴의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앨런 블라인더는 "또 다른 금융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sup>4)</sup>

블라인더는 그 이유를 6가지로 정리했다.

- 1) 2010년의 도드-프랭크 법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비교적 온화한" 이 개혁 시도도 무산됐고 금융 야수들은 또 다시 승리하고 있다.
- 2) 모기지를 증권화할 때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약간의 위험("skin in the game")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도 유야무야되고 있다.
- 3) 5조 달러에 이르는 파생상품 은행자산은 지금도 "장부 외" (off-balance sheet)에 있으며 규제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위험은 어느 누구도 추정할 수 없다. 기본적인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 4) 파생상품에 대한 진정한 개혁가는 왕따를 당하고 있다. 선물거래위원회의 의장인 개리 겐슬러(Garry Gensler)는 약하기만 한 도드-프랭크 법에 파생상품 조항을 넣으려다 월스트리트와 유럽 규제자, 미국 동료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다.
- 5) 신용평가사는 "여전히 그들이 평가해야 할 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의해 고용되고 보수를 받고 있다" .
- 6) 은행의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 은행이 예금이 아닌 자기 자본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2008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를 금지한 볼커룰(Volker rule)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즉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요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에 또 다른 금융위

4) Blinder, A., 2013, "Five Years Later, Financial Lessons Not Learned", WSJ. 10. S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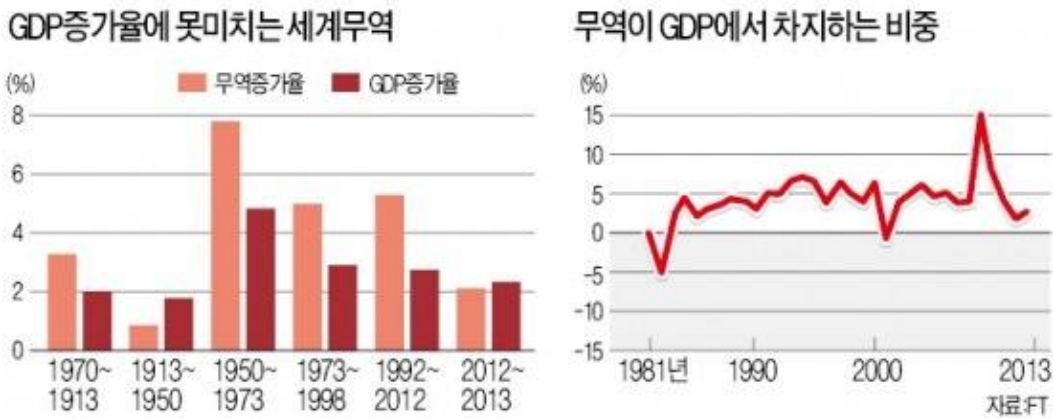


기는 필연적이라는 얘기다. 달러가 여전히 세계의 기축통화이고 월스트리트가 미국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금융기구 개혁이나 금융규제 강화는 말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중국이 이들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런 절망적인 수렁에서 빠져 나오려는 시도로서 미국과 중국이 G2체제라는 틀 안에서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 곳곳의 지뢰들 3) 무역증가율의 둔화?

영국의 경제학자 개리 데이비스(Garry Davies)는 ‘무역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의 두 배’라는 공식이 깨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sup>5)</sup>.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7%로 세계 경제 성장률(3.4%)의 두 배 이상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를 보면 무역증가율이 성장률을 오히려 밀도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난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 이후 무역이 GDP 보다 천천히 증가한 기간은 1913-1950년 간의 “탈세계화” 기간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경기순환 때문에 생긴 일시적 이상현상일까, 아니면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림 2 : 무역 증가율의 변화]



자료 : Financial Times<sup>6)</sup>

데이비스는 중국이 수출보다 내수에 주력하는 전략을 택하는 등 거대 신흥경제들이 선진국으로부터 자국의 성장을 분리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3D 프린팅 등 제조업의 혁명으로 선진국이 다시 제조업에 몰두하게 되는 현상(재제조업화)이 이런 현상을 일으켰으므로 구조적 변화라고 판단한다. 더구나 정책 측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는 가

5) Davies, G., 2013, Why world trade growth has lost its mojo, FT, 29, Sep.

6) 왼쪽 그림의 X축 맨 왼쪽은 1870-1913



운데 미국과 중국의 정치가들이 이런 정책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증가율의 둔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크루그만은 “GDP에 비교해서 계속 증가하는 무역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 수 세대 동안의 정책과 기술 때문에 일어났던 어떤 현상일 뿐이다. 우리는 그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거나 혼란스러워 해서는 안된다” 고 대답한다.<sup>7)</sup>

장기적으로 산업생산과 GDP는 대체로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인데, 제조업 제품이 무역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기에 무역이 GDP보다 더 출렁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만 1980년대의 무역자유화, 발전도상국의 개방, 그리고 생산의 수직분할(통합의 분해, 즉 off-shore)이 일어나서 무역 증가 속도가 더 높았을 뿐이었다. 이런 세계화 추동요인들은 일회성 변화여서 앞으로는 무역-GDP 비율이 평평한 고원처럼 일정한 수치를 유지할 거라는 얘기다. 즉 구조적 변화이긴 하지만 지난 30년간의 현상이 특이한 것이므로 그리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자는 현재의 무역증가율의 축소가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효과가 누그러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데 동의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봐도 무역자유화가 경제성장을 이끈 시기에는 거대 경제 중 하나가 고도성장을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그 생산물을 소화해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50년에서 1973년까지는 유럽이, 그리고 1973년에서 1998년까지는 일본과 동아시아 경제가 이를 주도했으며 부와 소득이 압도적이었던 미국이 그들의 수출을 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은 세계 한 쪽의 부채주도성장(미국과 남유럽 등의 수입증가)과 수출주도 성장(중국과 독일 등의 수출증가)가 맞물린 총수요 확대기였고 이것이 거대 신흥경제를 세계무역에 끌어 들여 전체 무역증가율을 비상하게 끌어 올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는 부채주도성장의 파산을 의미하므로 이런 무역증가율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즉 분명한 구조변화가 일어난 것이며 앞으로 흑자를 바탕으로 고동성장 국가의 수출을 받아줄 나라가 필요하지만 동아시아나 독일이 그 역할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데이비슨의 주장대로 구조변화가 일어났고 크루그만의 말대로 평평한 고원처럼 무역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며 딱히 세계의 수출을 소화해서 총수요를 확대시킬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세계경제의 상황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세계경제는 위에서 거론한 지뢰들이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3%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7) Krugman, P., "Should Slowing Trade Growth Worry Us?",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3/09/30/should-slowing-trade-growth-worry-us/?\\_r=0](http://krugman.blogs.nytimes.com/2013/09/30/should-slowing-trade-growth-worry-us/?_r=0)



2. 경제성장률은 몇 %일까? : 2014년 한국 경제 전망

[표 1 : 한은과 국회예정처의 2014년 경제 전망]

	2012	2013e		2014e	
		정부(12년 12월)	한은(13년10월)	한은	국회
GDP	2.0	3.0	2.8	3.8	3.5
민간소비	1.7	2.7	1.9	3.3	2.6
설비투자	-1.9	3.5	-1.2	5.7	5.8
건설투자	-2.2	2.0	6.1	1.7	1.4
상품수출	3.8	4.3	5.5	7.2	7.9
상품수입	1.5	4.6	3.8	6.9	8.0

출처 : 한은, 2014년 경제전망, 2013.10. /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및 중기전망, 2013.10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8%와 3.5%로 예측했다. 금년의 이 예측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과거의 실적을 보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과연 경제전망을 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표 2 : 예산안 편성 시(즉 매년 9월) 정부의 전망치와 실제치의 차이]

	예산안편성지침 상 전망치	예산안 편성 시 전망치	실제치
2011년	5.0%	5.0%	3.7%
2012년	5.0%	4.5%	2.0%
2013년	4.0%	4.0%	1.5% (1분기)
2014년	4.0%	-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재정운용방향 및 주요 현안”, 2013.8, p13.

국회 예정치가 정리한 [표2]를 보면 정부의 전망은 2011년 1.3%p, 2012년 2.5%p나 빗나갔고 금년에도 정확한 예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표1]의 두 번째 열, 정부의 2012년 12월의 전망은 3.0%로, 그해 9월의 4%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p나 축소된 것이다)

우선 금년의 경제에 대해 정부의 작년 12월 전망과, 두 분기의 실적치를 반영한 한은의 금년 10월 전망을 비교해 보면([표1]의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의 비교) 설비투자에서 4.7%p 정도, 그리고 민간소비에서 0.8%p 정도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매년 정부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에 기대를 걸고 높은 성장률을 전망했다가 3년 연속 실적이 이에 못 미친 결과 계속 잘못 된 전망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금년 성장률이 원래 전망치에 근접한다면 그것은 대외부문의 흑자와, 정부가 가장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건설투자 실적이 전망보다 괜찮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2014년 전망을 보면 한은(3.9%를 전망한 정부도 대동소이)은 과거와 다름없이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은의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이 금년의 1.9%에서 내년 3.3%로, 그리고 설비투자가 -1.2%에서 5.7%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국회 예정치는 내년의 증가율을 민간소비 2.6%, 설비투자 5.6%로 전망했다. 한편 대외부문은 경상수지 흑자를 450억 달러(한은)에서 510억 달러(국회)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부문으로 인해 약 0.45%에서 0.5% 정도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과 국회가 민간소비 증가율을 금년보다 0.7% 내지 1.4% 높게 잡은 근거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 고용지표의 개선,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증가 등이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작년의 예측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가계부채 부담, 전세가 격의 상승, 한계 자영업자의 증가 등이 내년에 그다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과연 민간소비가 1.5% 가량 더 늘어날 수 있을까? 만일 사람들이 금년과 동일한 정도의 소비를 유지한다면(즉 증가율 0) 소비가 GDP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니까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에 비해 약 0.7% 가량 줄어들게 된다.

올해도 천문학적 이윤을 올린 대기업은 현금보유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여력이 있다.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각 기업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즉 케인즈를 인용하면 “동물적 본능”(animal spirit)에 따르는 것이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즉 위에서 우리가 지적한 지뢰들이 터질 확률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금년에 마이너스였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내년에는 한은과 국회의 예측대로 6% 가까운 수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진 경제가 한국 대기업 제품을 갑자기 많이 수입한다거나 중국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동안 보류되었던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낙관 쪽의 요인이고, 준재벌급 기업들의 부실은 비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는데 그 이유는 2003년경부터 중국 등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BRICs 국가들의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브라질, 러시아 등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 성장률과 한국경제성장률의 격차는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세계경제성장률은 기관에 따라 2.9%(UNdesa)에서 3.5%(IMF) 까지 전망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성장률은 이 사이에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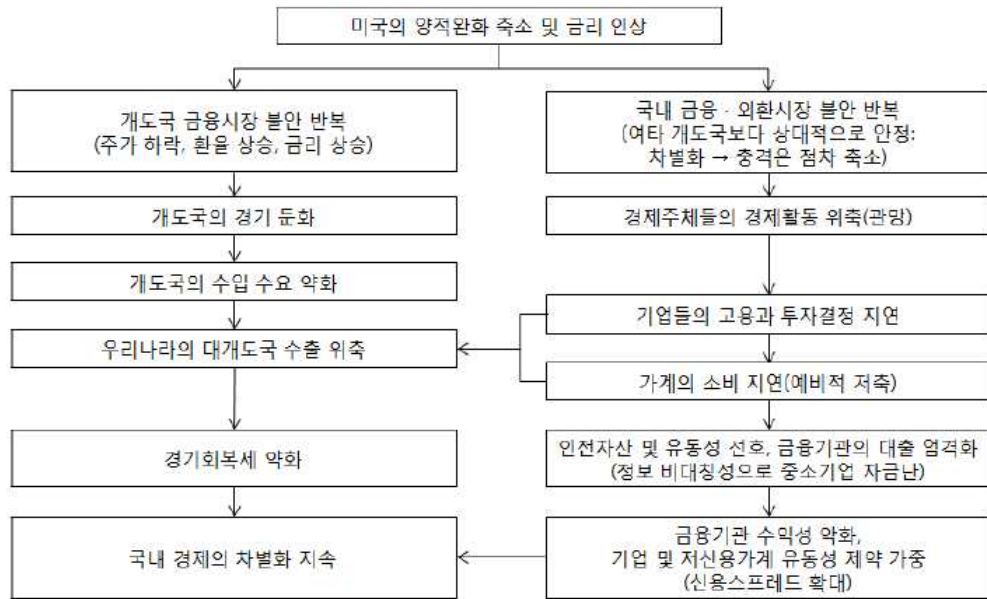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해 보면 내년의 경제성장율은 정부나 한은의 예측보다 0.5% 정도 낮은, 3%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에 비해서는 정부의 전망치와 실적치가 상당히 가까워질 거란 얘기다. 한편 금년에 괜찮은 성적을 보인 고용 부문에서는 내년도에도 4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노인, 그리고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증가여서 질적으로 높이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3. 지뢰는 미리 제거하고, 튼튼한 경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그림 3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2013. 10

위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이 양적완화를 본격적으로 축소하면 현재 국내에 과도하게 들어온 외국자본이 빠져 나감으로써 직접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현실화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각 경제주체는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본유출입의 속도와 규모를 떨어뜨려야 한다. 즉 새사연이 “리셋 코리아” 에서 제시한 토빈세라든가 외환가변예치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금년에 국회 예정처가 2단계 토빈세(위기 시에 세율이 올라가도록 설계)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정부도 과거와 같이 두 자릿수 수출증가가 대규모 설비투자로 이어지는 호순환을 기대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수출대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그리고 건설경기에 맞춰져 있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이제 한국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즉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고용조건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확대로 내수를 늘려야 3% 이상의 성장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정책은 곧 국민들이 일제히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수용했던 경제민주화와 보편 복지를 실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미 증명되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정 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다. ▶



2013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11월 4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다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최정은
이슈진단	4/3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김병권
이슈진단	4/11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병권
이슈진단	4/24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5/2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여경훈
이슈진단	5/9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6/7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이은경
이슈진단	6/12	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김병권
이슈진단	6/17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여경훈
이슈진단	6/27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김수현
이슈진단	8/13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여경훈
이슈진단	10/8	인구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전망	여경훈
이슈진단	10/11	2014년 정부예산안: 보육 및 일가정 양립 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10/14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김수현
이슈진단	10/24	동양 사태는 왜 발생했는가?	여경훈
이슈진단	10/31	동양 사태가 보여준 재벌 개혁의 필요성	김병권
이슈진단	11/4	지뢰밭 속의 순항? : 2014년 경제 전망	정태인